

야 3당, 선거제도 개편 촉구

여야 5당 대표 새해 첫 회동

손학규 “의원정수 조정 검토 없이 반대하는건 연동형 부정”

정동영 “무작위로 300명 시민 위원단으로 선거개혁안 만들자”

이정미 “다당제 안정화되면 국민들의 이익도 가속화”

야 3당 대표는 7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 오찬모임인 ‘초월 회’ 회동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 이행을 거대 양당에 촉구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를 치르지 않는 올해에 많은 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도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낮 국회 사랑제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면서 유치원 3법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올해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을 지적하며 “선거가 없으니 제도 개혁이나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할 것, 바꾸는 그런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초월회 오찬 간담회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원내외위원장, 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큰 진척이 없는 것과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지만 저희는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동결하고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 없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또 “정부·여당이 경제에 대해서 이념 편향적인 경제정책을 견어치우고 시장 위주로 기업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세금 깎아주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준다는데 그런 것보다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이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시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빨리 열려 평화가 경제의 막힌 길을 뚫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정부에서 조금씩 성과를 내기 보다는 여유를 갖고 한반도 평화가 제대로 이뤄지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2019년이 선거제 개혁의 적기라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진정성을 보이는데 이 기회를 못 살리면 언제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느냐”면서 “정개특위에서 3주 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하는 게 최선이다. 연동형 세 글자만 (합의문에) 들어가면 의석 늘리고 안 늘리고는 부수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생선가게를 고요히한테 지키라고 하면 온전하지 않듯이 국회

에 맡기니까 못 만드는 것”이라며 “무작위 추출로 300명의 시민위원단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해서 시민 집단 지성으로 선거제 개혁안을 만들고, 그 안을 대통령이 발의해 국회가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의원이 늘어나면 특권을 누린다는 건 사실 왜곡”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가 안정화되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거대 양당의 국회 제도는 되는 일은 없이 안 되는 일만 골똘하는 국회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초월회 정신이 국회 안에서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이 있어야 하고, 집권 정부와 국회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뉴시스

신임 靑 비서실장에 노영민 대사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에 노영민 주 중국대사를 내정했다. 이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에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내정됐다.



노영민 비서실장 내정자(사진 왼쪽부터), 강기정 정무수석 내정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내정자.

문 대통령은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 및 국민소통수석에 대한 복수의 인선 검증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7일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는 새로 임명된 참모진이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증은 끝난 것 같다”며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가 열린 다음 곧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인추위가 내일 열릴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 비서진 인선 검증 결과는 인추위와 관계없이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임 비서실장에는 노 대사를 비롯해 조윤제 주미대사 등 복수 인사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오랜 ‘정치적 동지’인 노 대사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복 청주가 고향인 3선 국회의원 출신의 노 대사는 2012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 2017년 대선 때는 조직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대선국면에서 ‘영입’된 임종석 실장이 ‘신(新)친문’이라면, 노 대사는 ‘원조 친문’ 격이다. 그가 집권 3년 차에 발탁된 것은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여론 내 분위기를 다잡고, 집권 중반 정책성과를 내기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무수석으로 내정된 강 전 의원은

신임 정무수석에 강기정 민주당 전 의원 신임 국민소통수석에 윤도한 전 논설위원

3선 국회의원 경력의 전남 고흥 출신이다.

국민소통수석에 내정된 윤 전 논설위원은 서울 출신으로 MBC 노동조합 초기 멤버로 활동했고, 작년에는 MBC 사장 공모에 지원하기도 했다.

비서실장과 정무·국민소통수석에 대한 인선이 발표되면 내년 총선에 대한 인선도 순차적으로 있을 예정이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비서관급 인사는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 조한기 1부속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등이다. 그간 국회문을 꾸준히 두드렸던 정태호 일지리 수석도 총선 출마 예상자로 꼽힌다.

이 중 권 관장 등 일부에 대한 인선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이 춘추관장으로, 신지연 해외언론비서관이 제2부속비서관으로 각각 자리를 옮기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8월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한 김영배 정책조정·김우영 제도개혁·민형배 자치발전 비서관 등 구청장 출신 비서관들의 출마도 예상되지만, 이미 지역구를 탄탄히 다져왔다는 점에서 인사 후순위로 거론된다. /김진성 기자

靑 특감반원 국정조사 특검 도입... 찬성 45.7% · 반대 41.6%

리얼미터 조사결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비리 의혹에 관한 특검 도입에 대해 국민 여론은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 보수는 찬성이, 진보는 반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20대의 경우 50·60대와 함께 찬성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지난 4일 YTN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표본오차 95%·신뢰수준 ±

4.4%p·응답률 7.1%)에게 청와대 특감반원 의혹 국정조사·특검 도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수사 외에 국정조사나 특검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 응답이 45.7%·검찰수사 전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 주장은 정치공세이므로 먼저 검찰수사를 해야 한다’는 반대 응답이 41.6%·‘모름 또는 무응답’은 12.7%로 집계됐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나 찬성이 반대보다 4.1%p 높았다. 정치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는 찬

성 64.7%·반대 23.7%인 반면 진보층에서는 각각 36.4%·55.0%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중도층에서는 찬성 43.8%·반대 45.8%로 맞섰다.

지지정당별로도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찬성 78.9%·반대 13.8%를,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61.4%와 34.9%·무당층은 54.5%와 26.9%를 보였다. 이에 비해 정의당 지지층은 찬성 23.4%·반대 69.2%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각각 19.3%와 62.7%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찬성 53.6%·반대 39.2%·대구·경북도

찬성 48.4%·반대 30.6%로 찬성 여론이 많았다. 반면 광주·전라지역은 찬성 43.6%·반대 50.9%를, 대전·세종·충청은 각각 40.8%·44.9%로 파악됐다.

서울의 경우 찬성 43.7%·반대 42.5%로 오차범위 내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며 경기·인천은 찬성 45.4%·반대 40.7%로 찬성 입장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찬성 53.5%·반대 35.0%였고 50대는 각각 52.9%·36.5%였다. 특히하게 20대에서도 43.5%·33.0%로 찬성이 높았다. 40대에서는 찬성 41.6%·반대 54.4%를, 30대는 각각 32.3%와 51.2%로 나타나 대립을 나타냈다. /뉴시스

한국·바른미래 “신재민 의혹 청문회 열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7일 새해 첫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원내대표들과 만나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은 운영위에서 차고 넘치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며 “이와 관련된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당이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이어 “각종 사찰 의혹, 청와대 불법 해 첫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김영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전국회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청문회 내지는 위원회 열어서 그런 점들에 대해 의혹을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

한바탕 전주